

빠른 정답

1	③	2	①	3	②	4	④	5	②
6	④	7	⑤	8	①	9	②	10	④
11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①
16	③	17	④	18	④	19	①	20	⑤

1. [정답] ③

[출제 의도] 이론 윤리학(가), 메타 윤리학(나)의 이해

[정답 해설]

③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진술은 이미 평가원 기출 제시문 및 선지에서 여러 번 출제된 소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회에 이 구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해 보도록 하자.

메타 윤리학은 주로 이론 윤리학이 주장하는 도덕 규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기존의 다양한 이론 규범은 각각의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메타 윤리학은 이러한 이론 윤리학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이론 규범이 갖고 있는 논리적 구조, 이론 규범에 쓰이는 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규범이 옳다고 믿기 전에, 그 규범이 갖고 있는 내적 논리가 타당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메타 윤리학은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별칭된다.

메타 윤리학은 이러한 분석 작업을 실시할 때, 기존의 규범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본다. 즉 어떠한 규범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범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태도를 선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메타 윤리학은 최대한 객관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기술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관습, 현상이 있을 것이고, 아메리카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관습 및 현상이 고유하게 존재할 것이다.

기술 윤리학은 이러한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도덕 현상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려는 의의를 지닌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인사 예절, 식사 예절 등 다양한 도덕 행위가 있을 것이다. 기술 윤리학은 이러한 관습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특정 문화권이 갖는 도덕적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과 윤리학을 연계하여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생명 과학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전학, 미생물학 등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과 윤리학을 연계시켜야 현실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 윤리학은 급변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인간이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론 윤리학은 실천 윤리학과 함께 '규범 윤리학'에 속한다. 즉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메타 윤리학만이 동의할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논증이 타당한지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정답 해설을 참고해보자.

반면 이론 윤리학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논증이 이미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있고, 그 논증이 포함된 규범이 사람들에게 당위 규범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정답] ①

[출제 의도] 아도르노의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 이해

[정답 해설]

①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대중들의 욕구를 통제한다고 본다. 제시문에 명시된 것처럼, 문화 산업은 대중들의 모든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 욕구들은 진작에 문화 산업에 의해 통제되고 조장된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입장이다. 즉 문화 산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④, 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대중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들은 주체성을 잃게 되고(②),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 또한 불가능하게 된다(④). 즉, 문화 산업은 인간을 규격품과 같이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자, 인간을 인간 그대로 존중하지 않으려 함을 암시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대중들이 문화 산업에 종속되어, 문화 산업의 영원한 소비자에 불과하게 되며, 다양한 예술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③). 또한 문화 산업은 대중들이 예술의 미적 가치를 간과하게 만들며, 오로지 예술을 물질적 가치나 교환적 가치로만 판단하게 만든다고 본다(⑤).

3. [정답] ②

[출제 의도]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

[정답 해설]

② 하버마스는 담론으로부터 도출된 부작용도 구속력을 지닌다고 본다. 다만, 담론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재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도 기억하자.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오답 해설]

① 하버마스는 담론이 도구적 합리성을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도구적 합리성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은 근대 과학 등에 기여하였지만, 하버마스는 도구적 합리성이 인간의 다양한 면모가 발휘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도구적 합리성을 의사소통의 합리성으로 대체하여, 다양한 인간들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찾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도구적 논리의 일원론적 사고 방식을 인간 상호 간의 대화가 갖는 다원론적 사고 방식으로 대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가 자신의 주장과 개인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이들이 담론 참여자가 갖는 권리라고 보며, 이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소수이든 다수이든 자신의 주장, 선호,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담론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의 준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즉, 자신의 주관적 원칙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버마스가 칸트의 보편성 정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⑤ 하버마스는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상황을 배척하고자 한다. 만약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일지라도 소수가 반대한다면, 하버마스는 담론 결과로 합의될 수 없다고 본다. 하버마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

4. [정답] ④

[출제 의도] 칸트의 의무론 응용 이해

[정답 해설]

④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며, 자신의 행복과 의무가 충돌되는 상황에서는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에 의하면, 의무를 따름으로써 행복해질 수는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는 다르다.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아니다.

가령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자신이 자원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그 동기가 입시 가산점을 얻기 위함이므로 의무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양자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이는 생윤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공리주의자 밀의 입장이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쾌락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많은 양의 저급한 쾌락보다는, 차라리 적은 양의 고급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대 행복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한 최대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밀, 2019학년도 윤사 수능 제시문]

② 공리주의자의 입장에 해당한다. 공리주의자는 개별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여기서 공동체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과 같다.

③ 공동체주의자 매킨타이어의 입장에 해당한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에 부합하도록 행위해야 하며, 행위자의 성품이 개별 행위보다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그리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고 본다. 윤리와 사상

에서는 아퀴나스가 심도있게 출제되지만, 생윤에서는 깊게 출제되지 않는 추세이므로, 이 정도로만 암기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5. [정답] ②

[출제 의도] 소수자 취업 우대에 대한 토론 이해

[정답 해설]

② **을이 동의하고 갑이 부정할 질문이다.** 을은 소수 집단의 청년들이 취업 가산점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은 그러한 취업 가산점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문제삼는다.

[오답 해설]

①, ③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두 사람 모두 청년 취업을 감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④ **갑과 을 모두 동의한다.** 두 사람 모두 취업에서의 기회 평등은 모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갑은 소수 집단의 청년들에 대한 취업 가산점이 기회의 평등을 해친다고 보며, 을은 오히려 취업 가산점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⑤ **갑과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람 모두 공개 경쟁을 통해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6. [정답] ④

[출제 의도] 장자(갑), 불교(을)의 동양 사상 이해

[정답 해설]

④ **불교는 자아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본다.** 불교 입장에서 자아란 자기 실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공(空)에 입각한 가변적 존재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를 고정 불변한 항상적 실체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에 해당한다. 인간의 신체는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이라는 오온의 결합으로 구성된 결과물인데, 오온 또한 본질상 자기 실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교는 모든 것이 상의 상관성을 지니며,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설, 무아론(無我論)에 해당한다.

연기론에서 보았듯이 현상 안에 궁극의 요소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 궁극의 요소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의 없음 즉 공(空)이 드러난다는 것은 일체의 현상은 공에 기반한 것임을 말해준다. 현상의 연기성은 곧 현상의 공성(空性)을 말해주는 것이다. 현상은 실체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공에 기반한 것이며, 따라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 불교에서는 그런 오온을 불변하는 항상된 자아로 잘못 사랑하여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통의 근원인 자아에의 집착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아라고 간주하는 오온에 진정 자아라고 할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색수상행식 일체가 모두 무상(無常)이고 고(苦)이며 공(空)이고 무아(無我)라는 것이 불교 무아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한자경, 『불교 철학의 전개』]

[오답 해설]

① 장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일례로, 사회 규범이나 제도와 같은 것은 인의예지로 대표되는데, 이는 인간을 억압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사회 규범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주장한다.

②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귀천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의 관점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며, 인위적인 기준으로 귀천, 선악, 미추, 시비 등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른 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도(道)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도에 관점에서, 인위적 구별을 지양하려는 무위적인 태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답 해설] 참고.

⑤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克己復禮)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사상은 유교 사상에 해당한다.

7. [정답] ㉟

[출제 의도] 갑(로크), 을(홉스)의 사회 계약론 이해

[정답 해설]

ㄴ. 로크는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즉 로크는 자기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해서는 본유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에 타인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고 본다. 이는 로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에 해당한다.

로크에게 있어서 재산권은 인간의 양보할 수 없는 최고 권리이자 자유의 핵심 내용인 것이다. 그는 자유를 "자신의 소유물과 인신을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표현함으로써 경제적 개인주의자로서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조공호·강정인, 『사회 계약론 연구』]

로크가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사회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의욕도 이러한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는 것이다. 로크는 인신,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통칭하며, 국가는 개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수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로크는 자연인들이 사회 계약 당사자로서 처벌권 등은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보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는 국가에 양도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ㄷ. 로크는 국가가 지니는 처벌권은 계약 당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라고 본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연법이라는 보편적 도덕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며,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느 인간 또는 세계의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그 위반행위가 마땅히 치러야 한다고 그가 확신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사건의 가증스러움으로 인해 사형이 요구되는 범죄인 경우에는 심지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로크, 『통치론』]

그러나 이러한 처벌권은 무사 공평하게 행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처벌하고, 자기 자신과 관련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미온하게 처벌하는 등의 편파적 폐단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로크는 무사 공평한 판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각자의 처벌권을 정치 사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본다.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법의 재판관이자 집행자인데, 인간은 자신에게 편파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건안 경우에는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태만하기 십상이고,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격정이나 복수심으로 극단으로 치달거나 흥분하기 십상이다.

[로크, 『통치론』]

국가는 국가의 외부인이 그 구성원에게 침해를 가했을 경우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곧 전쟁과 평화에 관한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능한 한 사회의 전 구성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은 모두 자연법의 위반행위를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처벌할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그 사람은 또한 위정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관해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입법권에 양도한 것은 물론, 언제든지 국가가 스스로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할 때는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게 내준 것이다.

[로크, 『통치론』]

르. 홉스는 주권자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도 주권자의 판단을 승인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계약 이후에는 특정 주권자 선출에 대한 찬성 및 반대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홉스는 사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반대 투표한 주권자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선출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복종해야 함에 동의한다고 본다.

즉, 사회 계약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지만, 그 이후의 주권자 선출에 있어서는 다수결 투표가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코먼웰스’는 ‘다수’의 인간이, 상호 평화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만인 상호간에’ 합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 찬성투표한 자나 ‘반대투표’한 자나 모두 똑같이 그의 행위와 판단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판단으로 승인하기로 ‘신의계약’을 체결한 때 설립된다.

[홉스, 『리바이어던』]

[오답 해설]

7. 홉스와 로크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에 포함될 수 없다. 먼저 홉스는 사회 계약 시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홉스 입장에서 사회 계약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홉스는 자신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사람에 대해 저항할 권리 등, ‘생명권’에

있어서는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포기하는 신의계약이 폭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 신의계약은 무효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죽음, 상해, 투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자기보존 및 자기보호가 모든 권리포기 행위의 목적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저항의 포기를 약속하는 신의계약은 무효로서 어떠한 권리 이전도 없으며, 또한 어떠한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러저러한 경우에, 나를 죽이라'고 신의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이러저러한 경우에,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결코 저항하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홉스, 『리바이어던』]

로크 역시 사회 계약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로크의 사회 계약이 갖는 목적은, 개인의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로크는 자연권 중 자연법에 대한 처벌권을 양도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재산권, 즉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홉스와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생명권 양도 불가'라는 부분이다. 이미 이 선지는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지만, 공통점으로 알아 두면 맥락 파악에 좋을 것이다.

8. [정답] ①

[출제 의도]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견해 이해

[정답 해설]

ㄱ, ㄴ. 하이데거는 기술이 사물의 은폐된 측면을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본다. 이른바 현대 기술은 자연을 '탈은폐'하는 방식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시절의 수공업의 경우에도 탈은폐는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탈은폐는 경건한 행위였으며, 자연을 '뉘달'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하이데거는 이에 반해 현대 기술에서 요구되는 탈은폐 방식은, 자연을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방식이라고 본다. 인간은 자연에서 자원을 얻기 위해, 자연을 무리하게 착취한다는 의미에서 '도발적 요청'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에 저장되어 있는 석탄, 우라늄 등의 물질들을 '내놓으라'고 '뉘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은 은폐된 것을 눈앞에 가져오게 한다(Her-vor-bringen)는 것을 의미하며, 즉 은폐되어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적 차원"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본다. 원래 기술을 단순히 인간의 수단 및 도구로 규정하는 개념은, 기술이 지닌 적극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즉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하이데거는 기술의 도구학적 규정에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인간이 현대 기술로 자연을 뉘달함으로써, 기술을 새로운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본다. 즉 현대 기술이 갖는 본질은 더 이상의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기술이 인간을 종속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만 고찰한다면, 인간은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근대 기술의 특수한 성격을 탈은폐의 한 방식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기술으로써 에너지를 채굴하여 저장하기도 하며, 이를 위해 자연에 도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현대기술의 본질이 몰아세움에 있고, 현대 기술은 정밀 과학에 바탕을 둔다. 현대 기술이 요구하는 인식에서의 탈은폐는 사용 가능하고 쓸모 있는 것을 제작하고 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탈은폐이다. 현대 기술은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 과학에서의 탈은폐를 몰아세운다. 과학은 통제와 지배를 위한 지식이고, 기술은 통제와 지배를 목적으로 작업하는 행위이다. 현대 기술의 몰아세움은 통제와 지배의 몰아세움이다. 몰아세움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도발하여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탈은폐를 하도록 몰아세워지기 때문에 자연은 석탄을 내놓으라고, 우라늄을 내놓으라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다그침을 당한다.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올바른 도구적 규정은 기술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결코 도구 자체를 탈은폐의 한 종류나 진리와 연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구는 어떤 사물을 수단으로만 관련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행위로서 기술은 탈은폐가 가능한 방법과는 거의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은 기술이 단지 수단이 아니라 탈은폐의 한 방식임을 보이기 위해 그 자체가 전회하는데서, 곧 일반적으로 규정된 기술을 비판하는데서 비롯된다.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오답 해설]

ㄷ, ㄹ.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을 가지 독립적으로 고찰한다면,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기술에 불들리게 된다고 본다. 이는 기술에 인간이 종속되는 부자유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대 기술에 대해서 가치개입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불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독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하이데거,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9. [정답] ②

[출제 의도] 롤스의 시민 불복종 이해

[정답 해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무제한적으로 가담할 경우에는 사회 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내용은 롤스가 주장하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중 하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먼저, 롤스가 시민 불복종이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된다고 보았는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1.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나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때 시행되어야 한다.
2.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반대 수단을 먼저 시행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시민 불복종에 가담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안 된다. 즉,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집단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

해당 선지는 위 정당화 조건 중 3번째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요약하자면, 1, 2를 충족하였을 경우 시민 불복종은 대부분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가담하는 집단이 너무 많다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의 가담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많은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행할 경우, 체제가 파멸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동기가 법의 심각한 부정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 체제 자체의 부정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비록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있다 하더라도 체제 그 자체는 정의로운 곳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롤스는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무제한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의 가담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위 이유와 더불어, 시민 불복종 문제를 처리하는 공의회(국가 기관)의 판단에도 있다. 시민 불복종은 본디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수많은 집단들이 시민 불복종을 시행한다면, 국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혁명이나 쿠데타로 인식할 수도 있다. 즉,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가담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방금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항의를 처리할 공의회 능력에도 상한선이 있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집단들이 하고자 하는 호소가 왜곡될 수도 있고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 가지 혹은 양쪽의 이유로 인해서 항거의 형태로서의 시민 불복종의 효율성은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감소하게 되며, 시민 불복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롤스, 『정의론』]

[오답 해설]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불법적이라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을 때 행해지는 불법적인 수단이다. 즉,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자는 추후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cf) 본 선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시민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소재로 몇 구절 덧붙여보도록 하겠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 행위자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과연 시민 불복종 행위자를 무자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볼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법정이 항의자들의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성을 고려한다'라는 진술은, 시민 불복종을 하는 이유가 공통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잘못된 법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도를 이해한다면, 법정은 시민 불복종 행위자를 무자비하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인 제재를 줄여주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단 이러한 관용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므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의감에 의해 상당히 규제되

는 사회'에서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법정은 항의자들의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성을 고려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의 바탕을 이루는 정치적 원칙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혹은 뒷직하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하며, 이러한 근거로 해서 법적인 제재를 줄여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보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필요한 배경들을 결여할 경우에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은 일반적으로 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만 합당하고 효율적인 반대 형식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ㄴ. 롤스는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폭력 행위가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에 해당함을 암시한다. 롤스는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성격을 흐리게 한다고 보며, 청원의 양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마저 효과가 없을 경우, 즉 차후의 강력한 저항을 고려할 경우어나 폭력적 행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의 시민 불복종을 논할 때에는 시민적 자유를 간섭하는 폭력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롤스의 사상이다.

상해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 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다. 사실상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은 어떤 행위가 갖는 시민 불복종적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만일 청원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는 강력한 저항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이고 깊이 간직된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롤스, 『정의론』]

10. [정답] ④

[출제 의도] 칸트의 예술론 이해

[정답 해설]

④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이 모두 일체의 이해 관심으로부터 독립된다고 본다. 여기서 이해 관심이란, 이익과 해악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 즉, 자기

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 해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인데,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이 이러한 이해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먼저 도덕 판단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1단원 서양 윤리에서 칸트가 어떠한 것의 옳고 그름은 다른 어떤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선험적으로 성립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을 이미 배웠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 관심'에 근거한 판단은 도덕 판단이 아니다. 즉 자신의 이익이나 해악과 무관하게 오로지 보편적 원리에 부합하도록 판단하는 것이 도덕 판단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칸트는 미적 판단 또한 이해 관심과 무관하게 만족감을 준다고 본다. 칸트는 미적 판단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의 조화"가 필요한 것이지, 인간의 이익과 해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이해 관심에서 독립된다는 측면에서 "미"와 "도덕성"은 상호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미가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적 판단은 도덕 판단과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유사함을 가지므로, 인간의 도덕성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의 유사점 및 차이

구분	미적 이념에 근거한 미적 판단	이성 이념에 근거한 도덕 판단
만족감	- 이해관심 없이 만족감을 줌. - 개념 없이 마음에 드는 것을 상상하는데서 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한 만족감	- 이해관심 없이 만족감을 줌. - 도덕 법칙이라는 개념을 통한 만족감
무관심성	- 직접적인 무관심성과 관계됨.	- 직접적인 무관심성과 관계됨. - 도덕 판단에 선행하는 관심이 아니라 도덕 판단 후 생기는 관심은 인정할 수 있음.
자유	-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 - 상상력의 자유는 지성과 일치함	- 의지의 자유는 이성 원칙들과 일치함.
반성	- 아름다운 것에 대한 반성의 형식	- 도덕적인 것에 대한 반성의 형식
판단 원리	- 보편적인 것, 누구에게나 타당함. - 주관적 원리에 근거	- 보편적인 것, 누구에게나 타당함. - 객관적 원리에 근거

⇒ 미는 논리적 차원에서는 도덕성으로부터 독립적이지만,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선 유비적이거나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음.

[이두연(성신여대),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

[오답 해설]

①, ⑤ 칸트는 미적 판단이 자기 자신의 이익 실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며, 도덕 판단과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그 형식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정답

해설 참조.

② 칸트는 미적 판단이 개인의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형식에 근거를 둔다고 본다. 즉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지도, 지적이지도 않은 종류의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상징하고, 자연의 미(美)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선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감각적 즐거움이 아닌 예술 자체의 형식에서 찾을 수 있다.

[칸트,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칸트 :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의 판단 근거는 순수한 형식이다. (O)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③ 칸트는 미적 판단이 대상에 대한 객관적 개념을 넘어서, 상상력과 지성의 유희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일단 칸트에 따르면, 미적 판단은 주관적 원리에 근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과 지성의 유희”의 작용 결과로서 <공통감>을 통해 보편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미적 판단이 단지 혼자만의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길을 걷다가 아름다운 장미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장미가 아름답다는 판단은 분명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칸트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감>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미적 판단에 대해 타인에게도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자면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

- 1) 미적 판단은 대상의 객관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
- 2) 미적 판단은 주관적 원리에 근거한다.
- 3) 그렇지만 사람들 간의 <공통감>을 매개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미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오직 아름다운 대상이 그것에 적용되는 결정적 개념이나 개념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상상력과 지성의 유희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대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의 만족감을 뛰어넘는 통일감과 일관성을 주는 대상인 것이다.

[이두연(성신여대),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

11. [정답] ⑤

[출제 의도] 칸트(갑), 베카리아(을)의 형벌론 이해

[정답 해설]

ㄷ. 베카리아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고 본다.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형벌이 온건하게 집행되더라도, 그 집행이 확실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쉽게 상상을 해보자. 다음의 두 상황이 있다. 첫 번째로 (1) 체포될 시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체포될 확률은 50%인 상황과 (2) 체포될 시 온건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체포 확률은 100%인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베카리아는 이 둘 중에서 (2)가 더 범죄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만약 (1)이 시행되는 사회라면, 베카리아는 범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후 여러 후속 범죄를 저지룰 수 있다고 본다. 만일 절도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절도죄로 인해 잔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 목격자를 살해하는 후속 범죄를 저지룰 수 있다는 것이다.

베카리아는 이처럼 잔혹한 형벌은 범죄자의 도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도피 과정에서 여러 후속 범죄를 저지룰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이라는 형벌의 본 목적에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범죄자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지 않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본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르. 칸트와 베카리아 모두 동의할 진술이다. 즉, 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자가 사회 계약 시 사형에 동의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다.

1) 먼저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 당사자들이 사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 계약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의 일부를 포기하는 계약인데,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최소한의 자유만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베카리아는 인간이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베카리아는 형벌권이 각각 포기한 최소한의 몫이 구성하는 총합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베카리아는 사형이 본질적으로 사회 계약에서 합의될 수 없다고 본다. 베카리아에 따르면, 범죄자가 곧 사회 계약의 당사자인 까닭에, 범죄자가 사회 계약 시 동의하지 않은 형벌은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한 부분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없다. 그러한 환상은 공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타인을 속박하는 계약에 우리 자신은 속박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 각인에게 그의 개인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각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몫을 공동 저장소에 내놓을 것도 분명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도록 설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the right to punish)을 구성하게 된다.

○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2) 칸트는 이러한 베카리아의 견해에 반박한다. 범죄자가 사형을 동의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형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자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칸트는 사회 계약 당사자와 범죄자의 인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예지적인 인격과, 현상적인 인격이라는 이중적인 인격이 있다고 본다. 전자는 순수한 이성의 세계에, 후자는 현실의 감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사회 계약의 당사자인 예지적인 인격은 사적인 이익과 해악에 관계되지 않는 순수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을 의욕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칸트는 순수 이성적인 예지적 존재가 사회 계

약에서 입법을 의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현상적 인격이 사회 계약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형벌의 의욕 역시 예지적인 존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정리하자면, 베카리아는 범죄자가 사회 계약의 당사자이지만, 그들이 본질상 사형이라는 자유 박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보며,

칸트는 범죄자가 아니라 예지적 인격이 형법을 제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애초에 사형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으므로

범죄자가 사회 계약에서 사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오답 해설]

7. 칸트는 시민 사회가 해체되기 직전에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처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다음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 정당화된다.

1) 응보적 원리에 의해

: 칸트는 누구든 간에 자신의 행위에 동등한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여러 교과서나 평가원 진술에도 출제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2) 만약 그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일반 시민이 뒤집어쓸 수 있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선지 표현 자체는 올해 EBS 연계교재 제시문에도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외워두길 바란다.)

만약 시민 사회가 해체되기 직전까지도 감옥에 살인자가 남아 있다면, 시민이 그 살인자에 대한 형벌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민 사회의 해체를 이유로 그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시민은 그때까지 사형을 촉구하지 않았음으로써 공적 정의를 침해하는 데 가담한 자로 간주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엄한 이유로 덤태기 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칸트는 시민 사회가 해체 직전에 있더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처형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예컨대, 섬에 거주하는 국민이 서로 헤어져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을 결의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누구든 자기의 행실에 값하는 것을 당하고, 살인죄가 이러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처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의를 공적으로 침해하는 데 참여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ㄴ. 베카리아는 범죄 발생 후 곧바로 신속한 형벌이 이루어질수록, 그 형벌은 더욱 정당하고 유용하다고 본다. 만약 형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 집행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부정적인 상상력이 극대화되어 고통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른 시기와 형벌이 행해지는 시기 사이에 구금되는 기간이 길수록, 범죄자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고통받는다는데, 이는 사회 계약에서 '최소한의 해악'만을 양도한 것과 위배되기 때문에,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범죄 발생 후 신속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 후 곧바로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수록, 그 처벌은 더욱 정당하고 유용하다. 왜 더 정당하다고 하는가? 범죄자로부터 불확실성이라는 무용하고 잔혹한 고통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의 고통은 범죄자의 상상력의 강도 및 개인적 무력감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다. 신속한 처벌이 보다 정당한 것은, 자유박탈 그 자체가 일종의 형벌인 까닭에, 형의 선고가 있기 전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도 이상으로 자유박탈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신속한 처벌은 훨씬 유용하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두 관념 사이의 연상이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2. [정답] ⑤

[출제 의도]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이해

[정답 해설]

⑤ 정약용은 관청의 재물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절용(節用)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약용은 절용을 지키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정약용은 공직자가 의(義), 법(法), 상관(上官), 그리고 백성[民]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허물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②, ③ 정약용은 공직자가 백성에게 뇌물을 제멋대로 받아서는 안 되며,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고 본다. 굉장히 당연한 진술이다.

④ 정약용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인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견리사의 정신에 해당한다.

13. [정답] ③

[출제 의도] 갑(보수주의), 을(자유주의) 성 윤리 이해

[정답 해설]

③ 을 제시문에서는 '타인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 간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가 정당하다고 쓰여 있다. 독해형 문항을 풀 때에는 지문을 꼼꼼하게 잘 읽어야 한다. 성 윤리 사상에 등장하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가 각각 갖는 큰 틀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게 출제될 수 있으므로 항상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오답 해설]

① 보수주의는 출산을 계획하는 성적 행위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② 보수주의는 상호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부부 간에 출산을 계획하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④ 자유주의는 쾌락 그 자체를 위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도 긍정한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⑤ 보수주의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사랑을 전제로 한다. 반면 자유주의는 당사자들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4. [정답] ④

[출제 의도] 롤스(갑), 노직(을)의 분배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ㄱ. 롤스는 개개인의 천부적 운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분배를 천부적 운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오히려 소득 격차를 심하게 만들어서 개인의 자존감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리한 여건을 타고난 사람은 자신의 자질을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고, 불리한 여건을 타고난 사람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례로, 롤스는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는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이 분배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

(cf. 자연적 자유 체제는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고안한 체제로, 롤스가 반대하는 체제이다. 롤스는 운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민주주의적 평등 체제를 주장한다.)

자연적 자유체제에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 사회적 우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현재의 불평등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임의적인 요인들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자연적 자유체제에서의 부정의는 임의적인 요인들에 의해 분배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동익, 「롤스 『정의론』 해제」,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롤스는 개인이 타고난 운에 대해서도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스는 개인의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롤스는 자신의 운을 아예 포기하라고 본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롤스는 유리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 자신의 자질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차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자신의 여건을 활용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한 당사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그 이후에 유리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 자신의 행운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는 것을 허용한다. 즉 운이 분배에 일정 부분 개입할 수는 있지만, [운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롤스가 반대하는 것이다.

즉, 차등의 원칙은 하나의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원칙인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의미에서 차등의 원칙을 '호혜성의 원칙,'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별칭한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의 보다 큰 천부적 능력이나 공적을 사회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무시하거나 없애야 할 이유는 아니다. 그 대신 기본 구조는 이러한 유연성이 최소 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아무도 대신에 보상해줄 이익을 주거나 받음이 없이는 그의 천부적 자질이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임의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

[롤스, 『정의론』]

ㄴ.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

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사회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롤스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 조직의 요구에 따라,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롤스는 최소 수혜자들이 완전 평등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일단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최소 수혜자를 불평등한 분배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불평등을 구상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 수혜자는 비로소 이러한 조건하에 불평등에 동의할 것이며, 실제 사회 체제도 이러한 불평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원초적 입장에서 애초에 합의될 수 없다고 본다.

나는 당사자들이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고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들이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와 일관된다는 조건하에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한, 기본 구조는 이러한 불평등들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평등한 분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들은 말하자면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차등의 원칙에 도달한다. 평등을 비교의 근거로 간주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가장 적게 얻는 사람들에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롤스, 『정의론』]

ㄹ. 롤스와 노직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는 기본권, 즉 기본적 자유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자유의 전체적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기본권은 불가침적 권리인 것이다.

노직 역시 최소 국가가 개인이 지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권에는 재산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 가능하다. 노직은 최소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국가라고 보며, 그렇기에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한 국가라고 보지 않는다.

[오답 해설]

ㄷ. 노직은 취득과 이전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칙 또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래 인용문과 같이, 평가원은 취득, 이전, 그리고 교정의 원칙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직이 직접적으로 명시한 상황은 아니지만, 교정에서의 정의 원칙이 갖는 취지를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A가문의 유품을 과거(막 기원전 같은 시대)에 부정의가 일어나서 B가문이 약탈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후 수천 년이 지나서 조사해보니, 과거에 그 유품에 대한 약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그 유품을 다시 A 가문의 후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선지 표현 위주로 간단히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해당 표현은 충분히 출제될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유물에서의 정의 이론의 일반적 개요를 말하자면, 한 사람의 소유물은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 또는 불의의 교정의 원리에 의해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면 정당한 것이다.

[노직,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5. [정답] ①

[출제 의도] 칸트(갑), 테일러(을), 레오폴드(병)의 환경 윤리 사상 이해

[정답 해설]

※ 해설에 명시되지 않은 사상가의 입장을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가령 ㄱ 선지에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해설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ㄱ에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없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ㄱ. 칸트만의 입장이다. 칸트는 인간의 동물 학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본다. 즉, 동물 학대가 그릇된 행위인 이유는 도덕성에 유리한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의 의무는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이 성립된다고 보며,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본다. 동물과 자연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는 데 '관련되는' 존재이다.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칸트,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칸트, 2023학년도 수능]

따라서 칸트는 [자연이나 동물과 관련한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고 본다. 이는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된 선지이므로, 수험생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ㄴ. 테일러만의 입장이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인간의 평가와 독립적인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는 생명이 타고나면서부터 갖는 가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생명 중심 관점의 핵심을 이루는 믿음은 네 가지가 있다.

- (a) 다른 생명체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 및 동일한 조건으로 인간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 (b) 인간은 다른 모든 종들과 함께 상호 의존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며, 각 생명체가 잘 살거나 잘못되는 기회뿐 아니라 그 생명체의 생존도 환경의 물리적 조건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 (c)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d)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 존재가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그들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그들 자체의 생존, 건강, 안녕을 참조하면 이해할 수 있다. 생명체로서 그들은 자체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목적에 맞게 구조화된 기계 장치는 그렇지 않다. 식물이나 동물이 하는 것은 그 개체가 왜 하는지를 그 개체의 목적 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기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기계 생산자인 인간이 기계를 만들 때 품었던 목적을 언급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레오폴드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오폴드는 테일러와 달리, 모든 생명체의 가치가 인간의 평가에 의존한다고 본다. 밑의 ㄷ 해설에 명기하였듯,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윤리적 관점으로, 그리고 심미적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긍정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의 모든 개체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칸트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칸트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는 모두 인간에 평가에 의존적인 수단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라고 본다.

[오답 해설]

ㄷ. 레오폴드는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만'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미적 및 윤리적 관점도 동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 관점으로도 살펴봐야 한다.

[레오폴드,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 경제적 관점은 자연을 인간의 이해 관계에 기반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이해'란, 이익과 해악

을 의미한다.

2) 심미적 및 윤리적 관점은 자연을 인간의 이해 관계와 무관하게 바라보는 관점이다.

ㄹ.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가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칸트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더라도 이성적 능력이 없는 개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즉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인 것이다.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더 나아가서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16. [정답] ③

[출제 의도] 칸트(갑), 갈통(을)의 평화 사상 이해

[정답 해설]

③ 갈통은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갈통은 평화의 지속성을 더 중요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폭력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집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갈통은 폭력 감소는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폭력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 또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갈통,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 해설]

①, ② 칸트는 국가 간의 일시적인 휴전 조약은 평화 조약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칸트는 평화 조약은 국가 간의 특정한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의로 맺

어저야 한다고 본다. 즉 추후의 전쟁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는 조약은 일시적인 휴전 조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국가들이 '평화 조약'이라는 미명으로 잠시 휴전하였다가 추후 당사국 간의 전쟁이 재발한 경우는, 진정한 평화 조약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다.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인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되며, 따라서 "영구적"이란 단어를 덧붙이는 것조차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칸트, 『영구 평화론』]

따라서 칸트는 진정한 평화 조약은 당사국 간의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본다. 그런데 칸트는 평화 조약만으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평화 조약은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 조약의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의 사회계약론적인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칸트의 논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계약론으로 하나의 국가가 건립된다.
2. 그러므로 국가들 간에도 사회 계약과 유사한 하나의 계약이 필요하다.

일단 대표적으로 흄스 이론에 나타난 사회 계약론을 간단히 복기해보자. 일단 흄스는 자연 상태의 혼란스러움을 벗어나고자 국가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도 이와 유사하다. 칸트는 사회 계약으로 국가들이 건립되더라도 국가들 간의 관계는 본질상 법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 즉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다. 칸트는 흄스적인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국가들 간의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칸트는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관계에서도 국가들 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앞서 언급한 평화 조약을 다시 짚어보자. 칸트는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고 본다. 그러므로 평화 조약이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들 간의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조약'을 넘어서서, 넓은 의미의 '계약',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그리고 칸트는 이를 '평화 연맹', '평화 연합'이라고 일컫는다.

칸트는 평화 연맹에 국가들이 가입하고,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들 간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평화 연맹에 들어가서, 국가들 간의 상호 법적인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이러한 상황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국제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칸트는 평화 연맹이 모든 전쟁의 종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④ 갈통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평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물론 직접적 폭력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구조적 및 문화적 폭력까지도 제거되어야 하며, 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까지 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갈통의 입장이다.

⑤ 갈통만의 입장이다. 갈통은 평화 달성의 과정에서 오로지 평화적 수단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칸트는 평화 달성의 과정에서 방어 전쟁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그 전쟁이 침략 또는 섬멸의 목적을 지녀서는 안 된다. 칸트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쟁의 소멸을 주장하지만, 평화 달성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방어 목적의 전쟁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7. [정답] ④

[출제 의도] 불교(갑), 장자(을)의 죽음관 이해

[정답 해설]

④ 장자는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서 기의 순환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시비

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의 순환은 반복된다는 것이 장자의 입장이다.

[오답 해설]

①, ② 불교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윤회의 과정을 단절해야 한다고 본다. 불교는 이러한 과정에서 다음 생의 복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세상 사람들의 생사(生死)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供養)하면서 다음 생의 복(福)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자성(自性)]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불교,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③ 장자는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즉 도(道)에 위배된다고 본다.

요즘 사람들은 조문할 때, 자기 부모나 자식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해 한다. 그러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도(道)의 본성을 배반하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본성을 망각한 것이다.**

[도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⑤ 불교와 장자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교의 진리에 삶과 죽음은 고통의 일환이라는 것이 포함되고, 장자가 주장하는 진리에는 삶과 죽음이 본래 하나이므로, 죽음을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함된다.

18. [정답] ④

[출제 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정답 해설]

④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로 성립되며, 자연은 책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세대의 인간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미래 세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나스는 인간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해 일방적, 절대적, 비호혜적 책임을 지닌다고**

본다.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요나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오답 해설]

① 요나스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 즉 미래 세대도 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다. 요나스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가질 권리를 예견적으로 존중하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다.

실존하지 않는 것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존재하고 있다면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기 이전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존재에 대한 권리 주장은 존재를 통해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는 바로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 윤리가 제시하는 책임의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 상관이 없어야 한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② 요나스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성립된다고 본다. 즉 책임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따라서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희망보다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요나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③ 요나스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비의도적

인 결과까지도 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요나스는 행위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⑤ 요나스는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는 더 이상 전통 윤리학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본다. 전통 윤리학은 본래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현대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요나스의 입장이다. 따라서 요나스는 전통 윤리학의 관점을 넘어서,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고 본다.

현대의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는 너무나 새롭고, 그 대상과 결과가 너무나 새로운 것이므로 인간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고 단기적인 예견에 토대를 둔 전통적인 윤리의 틀로는 이 행위들을 더는 파악할 수 없다.

[요나스, 『책임의 원칙』]

19. [정답] ①

[출제 의도] 롤스(갑), 싱어(을)의 해외 원조론 이해

[정답 해설]

ㄱ. 롤스는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고통받는 사회의 통치자들은 자국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절대 빈곤을 겪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는 자원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는 자원 배분만으로는 기본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롤스의 입장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즉 원조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권 개선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단지 자원 배분만으로는 기본적인 정치적 및 사회적 부정의(돈이 종종 본질적임에도)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리란 점이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다.

[롤스, 『만민법』]

ㄴ.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통해 원조를 시

행해야 한다고 본다. 즉 원조 행위자와 원조 수혜자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싱어가 원조 행위자의 처지가 열악해진 상황에서조차 원조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싱어는 원조 행위자가 '자기 이익'을 고려해가면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 해설]

ㄴ. 롤스는 국가 간 자원 분포의 우연성은 원조 시행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자원이 얼마나 분포되어있는지가 국가 체제의 질서 정연함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지구적 평등주의자인 베이츠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천연 자원의 분포도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원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국가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게 자원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베이츠는 지구적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롤스는 자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자원을 통제하는 정치 체제가 불안정하다면, 내부의 빈곤률이 높을 수 있다고 보며, 반대로 자원이 다소 부족하여도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면, 빈곤률이 낮을 수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롤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정치 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지, 자원 함량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더 나아가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통치된다면,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한계적 경우를 제외하고- 없다고 추측한다. 역사적인 예들은 자원 빈국들(가령 일본)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자원부국(가령 아르헨티나)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정치문화, 정치적 덕목, 그 국가의 시민사회, 구성원의 성실과 근면, 혁신능력 등등이다.

[롤스, 『만민법』]

ㄷ. 싱어만의 입장이다. 싱어는 사회 구조 개선보다 절대 빈곤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싱어의 관점에서는, 사회 구조 개선에 신경쓰다가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굶어 죽어갈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싱어가 롤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에 해당한다.

원조의 목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걱정 체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빈민을 돕는 것은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싱어,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반면 롤스는 사회 구조가 질서 정연하게 개선된다면, 내부적인 절대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롤스는 절대 빈곤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빈곤의 문제는 주로 정치 체제의 결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나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은 다르다.

[롤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 [정답] ⑤

[출제 의도] 볼노브의 주거 윤리 이해

[정답 해설]

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거주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제시문에 명시되어 있듯, 진정한 거주가 실현되기 위해 볼노브는 "이성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며, 그 집에서 자기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본다.

[오답 해설]

① 볼노브는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러한 (자기 삶의)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고 본다.

②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와 독립되는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제시문 4-5번째 줄에 있는 "자기 집 같고, 마음 편하며, 믿을 만한 친숙함이 있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볼노브는 단순히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체험'을 통해 거주 공간과 내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④ 볼노브는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성적 노력은 진정한 거주의 필요조건인 것이다.